

국가지원 학자금 등록금 초과시 반환해야

교육부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 중복지원 피해 많은 학생들에서 혜택 돌아가게 하기 위해

앞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이 대학 등록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학자금 자료 제출 의무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학생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등록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학생이 학자금 대출로 300만원, 공익법인 장학금 300만원을 받았다면 이중 등록금 초과분인 100만원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이는 국가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학생이 대학·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

에서 중복해 지원받지 않도록 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만약 초과분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의 지급명령 및 소 제기, 민사집행법의 체류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을 기준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이 1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의 비영리공익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했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정도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전주 A고등학교 급식 말라죽은 개구리 나와

전주 A고등학교 급식에서 말라 죽은 개구리가 나와 한바탕 소동을 빚었다.

여름철 급식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전주 A고등학교 등에 따르면 전날 점심 급식 과정에서 한 학생이 밥공기 속에 든 개구리 사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잡곡밥 속에 든 것은 작은 청개구리 사체로 말라서 납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B 씨는 "어떻게 위생관리를 했기에 밥 속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급식 위생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바로 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급식 위생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대학생 행동 회원이 21일 오전 서울 미포구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및 경총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는 23일까지 계속된다.

200만원 미만 노동자 35% 외국인노동자 한국인 일자리 뺏을 것

10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는 47%에 달해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우리 노동자 10명중 4명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연구위원이 21일 여성가족부 주최 제1회 다문화가족포럼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인(만 19세~74세)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중 34.6%가 외국인 노동자를 일자리 위협 요인으로 꼽았다.

이는 2011년 조사(30.2%)보다 4.4%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 노동자는 46.7%, 100만원이상~199만원 이하 41.2%, 200만원이상~299만원 이하 34.7%가 외국인노동자를 경계했다.

이에 비해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전체 평균보다 위협인식 비율이 낮았다. 600만원이상 노동자는 30.0%, 500만원이상~599만원이하는 30.4%, 300만원이상~399만원 이하는 33.1%로 각각 나타났다.

노동자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38.0%)이 상용직(29.7%)보다 위협을 더 느끼고 있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난 조사(24.1%)보다 8.1%포인트 오른 32.2%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협적으로 인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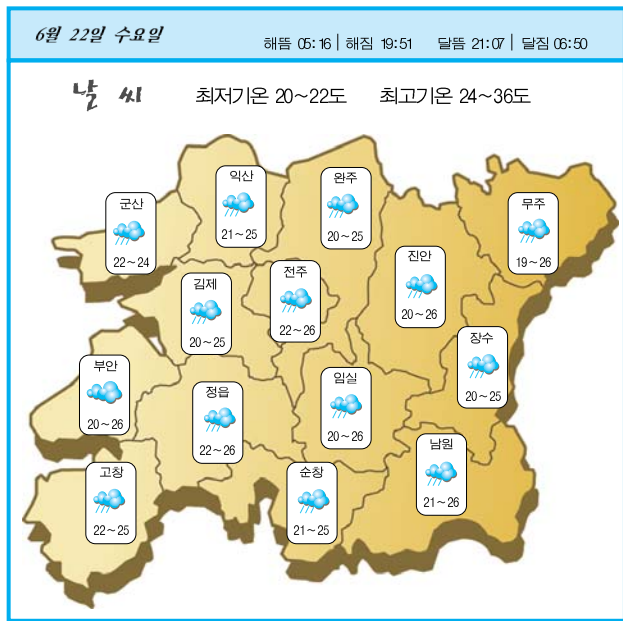
안 연구위원은 "일지리를 두고 경쟁하거나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현실적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경우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며 "상호협력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이 필요하고 다문화민간성교육 등 심화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외국인노

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중학교 졸업이하는 52.9% 고교 졸업자는 35.7%가 위협적으로 느낀다고 답했고 전문대 졸업은 28.9%, 4년제 대학교 졸업 28.7%, 대학원이상 2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35.8%)이 남성(33.4%)보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협적으로 지각했고 다문화교육 경험자는 21.7% 무경험자는 35.3% 다문화행사 경험자는 22.3% 무경험자는 35.2%의 위협인식을 갖는 등 다문화교육이나 행사 경험 여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기자



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글로벌 테마연수팀 모집

전북도교육청이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글로벌 테마연수팀을 모집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일반직 공무원 글로벌 테마연수팀'을 공개 모집한다.

도교육청 글로벌 테마연수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이 아닌 팀별(5~6명) 연수주제, 연수국가, 연수일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특히 경력이나 직급별 형평성보다 연수 주제의 참신성, 현장 적용 가능성을 우선으로 연수 대상팀을 최종 선발한다.

올해에는 정책과제 6팀과 자율과제 2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7월14일까지 테마연수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테마연수팀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구두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선발된 팀은 9월에서 11월 사이 10일 이내로 주제와 연관된 기관(학교) 방문 등을 통해 해외 우수사례를 둘러보게 된다.

글로벌 테마연수를 마친 후에는 전체 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 및 선진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도교육청이 2012년 처음 시작한 글로벌 테마연수는 해외 선진학교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글로벌 테마연수는 해외의 정책 및 문화 체험을 통한 세계적 인목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498명 정기인사 단행

전북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내달 1일자로 4급 서기관 승진 2명, 5급 사무관 승진 1명을 비롯해 지방공무원 승진 139명과 전보 242명, 신규임용 16명,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등 총 49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이날 단행된 지방공무원 승진자는 총 139명으로 각각 교육행정 4급 2명, 5급 1명, 6급 22명, 7급 49명, 8급 36명과, 전산, 사서, 식품위생, 사무운영, 시설관리, 운전, 위생·조리, 기계운영, 전기운영, 통신운영 등 29명이다. 지방서기관 중 김영택 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이 전북교육연구

정보원 총무부장으로, 박정길 서기관이 남원교육문화회관장으로, 고광록 서기관이 부안교육문화회관으로 발령됐으며, 지방서기관 승진은 김성화 사무관이 감사담당관실로, 김종명 사무관이 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의 정보는 전보희망자에 의해 233명이 본인의 희망지역에 배치되었으며, 본청 전입 공모를 통해 교육행정직 21명(6급 1명, 7급 1명, 8급 20명)이, 전산, 사서, 식품위생, 사무운영, 시설관리, 운전, 위생·조리, 기계운영, 전기운영, 통신운영 등 29명이다. 지방서기관 중 김영택 학생해양수련원 총무부장이 전북교육연구

/고민형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